

사회복지정책

Social Welfare Policy, Vol. 49, No. 3, 2022. 9. pp. 203-231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 수준과 원인*

황은정**, 김교성****

[요약]

본 연구는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 수준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가구 경상소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회귀분석 기반 불평등 분해를 수행하여 개별 변수의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여성 가구주의 노동시장과 가구 구성 및 자산 특성을 함께 고려하였고, 교차적 불평등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 각 변수의 조절효과도 살펴보았다. 사회경제적 특성과 불평등 지표를 통해 살펴본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 역시 높게 나타나, 자산 불평등이 가구 경상소득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주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자산과 가구 구성 변수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 집단이 경험하는 중첩된 불평등 현상을 발현한다.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취약 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여성 가구주 가구, 경제적 이질성, 교차적 불평등, 가구 구성, 자산

* 이 논문은 2017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제1저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eles@cau.ac.kr)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kyoseong@cau.ac.kr)

I. 서론

한 사회 내에서 여성이 겪는 불이익은 동질적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성 인구집단은 ‘성별’로 인해 사회 내 범주적 위계에서 ‘유사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적 구성물이 점차 증가하면서 젠더라는 범주에 더해 또 다른 축을 고려해야만 불평등 현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복합적·중첩적 불평등을 논의하는 젠더 불평등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 관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교차성 관점은 젠더, 계급, 인종 및 연령과 같은 불평등의 상호작용방식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다중적 억압을 드러내는 시간이다. 여성이 경험하는 불이익이 사회경제적 표식들과 어떠한 지점에서 교차되는지 분석할 수 있게 한다(김영미, 2015). 나아가 교차성 렌즈를 통해 현상을 바라보았을 때만이 중첩적 불평등을 경험하는 ‘가장 낮은 지위에 놓인 집단’을 분별해 낼 수 있다.

특히 젠더와 계급이 교차하면서 여성 ‘들’이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은 다양한 경로로 만들어진 사회적 구성물이라 할 수 있다. 특정 집단이 향유하는 것들이 사실상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부정의’의 산물일 수 있는 것이다(송다영·백경훈, 2019). 우선 근로소득 측면의 경제적 불평등은 돌봄 불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여성은 돌봄과 관련하여 생애주기상의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소속된 계층에 따라 불이익이 달라진다. 돌봄을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불이익이 모든 여성들에게 공통적인 것이라기보다 ‘계층화’되어 있는 것이다. 일례로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은 다양한 사회정책을 활용하여 고용지속성을 유지하는 반면, 취약 계층의 여성들은 근로소득 단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기 쉽다. 이러한 근로소득의 격차는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면서 전체 소득 불평등의 증가를 견인할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 극심해지는 자산 불평등의 파고로 인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여성은 가장 쉽게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자산소득이 자산 소유자들에게 집중됨으로써 상위 계층 여성들의 이윤은 확대되고, 하위 계층의 여성들은 근로소득 감소에 대비할 완충재를 갖지 못함으로써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은 점차 증가할 수 있다.

가구 구성이라는 사회적 배경 역시 여성 가구주 가구의 계층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가구 구성의 변화는 1인가구와 노인가구의 증가로 특징 지어지는데, 먼저 1인가구는 낮은 가처분 소득과 높은 불평등 수준을 가진 집단으로 상징된다(Johnson and Wilkins, 2003; 김종숙·배호중, 2014). 노인가구의 경우 생애과정 동안의 근로소득 수준과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연계성 등에 따라 집단 내 소득 격차가 극심하게 발생하는 집단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된 결혼 제도나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한 집단은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쉽게 배제되며, 다층적 배제

로 인해 특정 여성 집단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여성 집단 내 경제적 이질성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노동시장' 관련 변수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여성 집단 내 경제적 불평등을 유발하는 거시적 차원의 변수는 노동시장 자체이다(McCall, 2001; 황수경, 2003). 주요 주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불안정성의 증가가 여성 집단의 학력 간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범주를 일부 축소하여 특정 노동시장 변수를 지목한 연구들도 존재한다(Smith, 1991; 정이환, 2004; 이병희, 2014; 최민정, 2015). 각각의 연구들은 임금, 근로시간, 산업 부문 및 종사상 지위 등 구체적인 노동관련 변수들이 여성 개인의 소득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개인에서 가구로까지 관심을 확장하여 '가구소득' 불평등을 살펴본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김영미·신광영, 2008; 이순미, 2014; 문지선, 2015).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은 여성의 경제적 이질성을 발생시킨 요인이 미취업으로 인한 근로소득 단절, 저임금·저숙련 일자리, 그리고 이중 노동시장 특성이라는 점이다. 나아가 여성 개인의 소득 불평등이 곧 가구소득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하였음을 강조한다.

이상의 논의들은 우리 사회의 여성 가구가 가진 경제적 이질성 경향을 포착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개인 간 불평등이 가구 단위 불평등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다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여성의 '근로소득'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제한점을 내포한다. 첫째,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이 배제되어 있다. 둘째, 개인 단위 소득으로 불평등을 분석하고 있다. 셋째,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을 산출하는 요인으로 노동시장 변수를 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산 불평등이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을 심화시키는 역동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가구 구성이나 자산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소수 존재하나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을 발생시키는 변수들을 총체적이고 다중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김혜연·홍백의, 2009; 이현정, 2018). 이에 여성의 동질성을 전제하는 기존의 가설들을 해체하고 '교차적 불평등 관점'에 기반하여 불평등 논의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의 수준과 원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근거기반 불평등 완화 정책의 마련과 실행을 가능케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 수준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상소득' 불평등에 주목하였다. 이는 근로소득만을 중심으로 한 불평등 논의에 비해 확장된 차원의 불평등 양상을 분석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경제적 이질성을 산출하는 주요 원천인 부동산, 금융소득 등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를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여성 생애과정의 상이한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된 가구 구성 변수에 주목하기 위하여, 여성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을 가구 경상소득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적 전략을 통해 불평등 분석의 차원을 확장하고 노동시장 특성은 물론 가구 구성과 자산 변수의 영향력까지 고려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가구 구성(1인가구와 노인가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분석하여 불평등의 응집이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교차적 불평등의 영향이 극심하게 미치는 집단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 기반 불평등 분해를 분석방법으로 채택하여 각각의 독립변수가 전체 설명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 수준을 파악하고, 불평등을 야기하는 세부 변수의 기여도를 각각 살펴봄으로써 실효성 높은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불평등의 교차성 이론

여성 집단 내 경제적 이질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젠더와 계급의 교차성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교차성이란 용어는 1989년 미국의 흑인 여성학자 Crenshaw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성, 인종, 계급 등 서로 다른 부리에 기초한 두 가지 위계적 질서의 교호관계를 의미한다(김영미, 2010). 이 개념은 흑인 페미니즘과 노동 계급 페미니즘 영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먼저 흑인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백인 중산층 여성의 차이를 지적한 연구들은 열악한 근로 조건과 경제적 착취를 강조함으로써 젠더, 인종 및 계급 간의 전반적인 상호 연결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Yuval-Davis, 1983). 또 다른 부리인 미국과 유럽의 노동 계급 페미니즘에서는 젠더, 섹슈얼리티, 가족을 실현하기 위한 부르주아, 중산층 및 노동계급 조건(conditions)의 차이가 주로 논의되었다(Lykke, 2010).

교차성 관점을 견지하지 않은 동질적인 여성 집단을 전제한 논의들에서는 구성된 사회적 경로(social path)가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보았으며, 그로 인해 여성 전체가 경험하게 되는 불이익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때 젠더와 계층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여성 집단 내 경제적 이질성은 간과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각각의 축에 따라 동일한 범주 내에서도 복합적인 불평등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동질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개인들의 범주 내에는 권력과 불평등의 여러 상호작용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Korpi, Ferrarini and

Englund, 2013). 교차성 관점은 성별, 교육수준, 노동시장 지위, 가구 지위 등의 상호작용으로 가장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집단을 식별하게 한다.

교차성 이론은 젠더 연구에 널리 이용되어 인종, 계급, 성별 등이 결합되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불평등'을 관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McCall, 2001). 젠더가 사회의 다른 불평등 축과 어떻게 상호 연관되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집단이 경험하는 상이한 젠더 불평등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여성 집단 내에도 다양한 원인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을 가장 극심하게 받는 최하층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¹⁾ 예컨대 자산 수준이 낮은 노인가구나 1인가구는 소득이나 공유재산에 따른 완충효과를 갖지 못하므로 자산 격차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에 고스란히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불평등을 야기하는 여러 요인들의 불평등 효과가 배가되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보유한 자산이 적을수록 각종 원인들이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심해 지는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교차적 불평등 관점은 위계화된 사회적 구조 속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뚜렷하게 드러냄으로써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다.

2.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과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교차적 불평등이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부정의가 재생산된 결과라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은 불가피하다. 본 절에서는 정책적 관점에서 특히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구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여성들은 소속된 계층에 따라 돌봄, 노동 등과 관련하여 생애주기상 상이한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성별화된 생애과정 기획과 결정은 개인들의 사회경제적 자원에 따른 일정한 선택지 내에서 구성된다(Elder and Shanahan, 2006; 이순미, 2014). 돌봄을 선택함으로써 얻는 불이익은 모든 여성들에게 공통적이지 않은데, 실제로 고소득 계층 여성의 경우 민간 돌봄노동자를 고용하고 노동경력을 유지하는 한편, 저소득 계층 여성은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직접 아동을 돌보는 선택을 하게 된다(Morel, 2007; Kim and Hwang, 2020). 계층화된 돌봄의 선택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지속성이 결정되고, 이는 다시 고용을 유지한 여성의 임금을 증가시켜 계층별 지위를 공고히 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양산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저숙련 혹은 저학력 여성들이 생계를 위한 노동경력을 이어 왔지만, 최근에는 고학력 여성들의 높은 고용지속성이 포착된다(이순미, 2014). 양육기에 경력단

1) 이는 다중격차(multiple disparities)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여러 차원의 불평등이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불평등 체제를 형성하는 현상을 지칭한다(신광영, 2016).

절을 경험하지 않고 고용을 지속하는 여성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가 많은 반면,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여성은 저숙련 혹은 저임금 직종으로 집중되고 있다. 결국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의 선택이 사실상 엄존하는 위계적 구조 속에서 허용된 반경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불평등의 결과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회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둘째,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자산 불평등에 따라 여성 집단 내 경제적 이질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산 불평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근로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우리 사회에서도 부동산, 금융 자산 등의 격차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Murtin and d'Ercole, 2015; 이성균·신희주·김창환, 2020). 자산 불평등의 확대는 소득 불평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산 소유는 소수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에 고도의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보유한 소수의 계층은 근로소득의 증가율을 훨씬 능가하는 자산 가치의 확대 및 자산소득의 증가를 누리고 있다(공주·신광영, 2018). 여성은 돌봄과 경력단절로 발생하는 외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자산 확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기에, 여성 인구집단에게 미치는 자산 불평등의 영향은 더욱 극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구 구성 측면에서 불리한 노인이나 1인 가구주 여성의 경우, 자산 보유의 필요성이 높은 만큼 자산 불평등의 부정적 여파를 더욱 강도 높게 경험하는 집단이 될 수 있다.

셋째, 최근의 가구 구성 변화들은 여성의 경제적 이질성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구 구성의 변화는 1인가구와 노인가구의 증가로 특징 지어진다. 먼저 1인가구 비율의 증가는 주로 비혼, 이혼 및 사별 등 결혼상태와 생활양식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고령화 역시 1인가구 증가 추세에 기여하는데, 평균수명의 증가로 2030년까지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OECD, 2011). 동시에 많은 연구들에서 1인가구는 낮은 가처분 소득과 높은 불평등 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다(Johnson and Wilkins, 2003; 김종숙, 배호중, 2014). 실제로 여성 1인가구의 경상소득은 일반 가구에 비해 4배 이상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김정은·정혜은·남영주, 2018).

고령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증가도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전체 가구 중에서 근로소득이 없거나 그 수준이 낮은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 가구의 불평등 수준이 심화되었다. 노인이 경제활동에서 배제됨에 따라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저소득층으로의 전락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Cherlin and Seltzer, 2014; 계봉오, 2015).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노년기 총소득 감소가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집단이다(박시내, 2014). 나아가 노인가구는 자산 미보유의 불평등을 상대적으로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집단이다. 자산이 부족할 경우, 급격히 낮아지는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하여 빈곤층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산수준이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효과가 노인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넷째, 정책적 관점에서 여성 집단 내 경제적 이질성의 심화는 여성 간 연대를 저해하여 다양한 여성 정책들의 도입과 시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여성 관련 의제가 모든 여성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때, 여성 간 연대가 성립할 개연성은 낮아지게 된다. 특히 형식적으로는 보편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위 집단의 여성이 이용하기 어려운 제도들은 또 다른 차원의 사회적 불평등을 양산할 수 있다. 예컨대 보유한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주택연금 등이 역진적으로 작동될 경우 고소득층 여성 가구만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증가한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은 공적 가족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반면 고소득층 여성은 민간 돌봄 등을 이용할 여력이 있기에, 경제적 격차가 극심해질수록 가족정책 발전에 동원될 수 있는 집단적 정치 권력은 약화될 수 있다(Kang and Myers, 2018: 69). 여성 집단 내 경제적 이질성으로 인한 연대 약화는 장기적으로 여성 전반의 사회문제 해소가 정책 아젠다로 부상할 가능성을 희석시킨다. 따라서 여성 집단의 경제적 이질성을 고려하여 전 소득 계층에 소구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여성 간 연대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김영미, 2014).

3. 선행연구 검토

여성 집단 내 경제적 이질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크게 그 양상을 파악하고 요인을 밝히려는 연구들과 여성 개인 간 경제적 이질성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연구부터 살펴보자. McCall(2001)에 따르면, 25-64세 여성들의 불평등 수준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성과 불안정성의 증가가 핵심 요인이다. 반면 남성의 불평등은 기술적 변화가 더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에 대한 접근이 성별에 따라 구체화 될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 집단 내 경제적 이질성 현상과 사회적 파급 효과 및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황수경(2003)은 IMF 외환위기 이후 고학력 여성인력 증가와 함께 고임금계층이 성장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숙련, 저임금 직종에 여성이 집중되었다고 분석하면서, 여성 노동시장의 특성이 여성 취업자 내 소득분포를 양극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한편 세부적인 노동시장 변수들로 분석의 범위를 축소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Smith(1991)는 저임금·서비스직 일자리의 여성 고용율 확대가 근로소득 수익률 변화를 가져와 여성 집단 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하게 산업부문에 따른 불평등을 분석한 정이환(2004)도 서비스업 내 여성의 소득 불평등이 남성에 비해 높다는 점을 밝혀냈다. 여성

집단 내 불평등의 원인을 소득분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 이병희(2014)는 근로시간, 노동시간 및 임금률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영향력이 주로 중간 분위와 하위 분위에서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여성 자영업 집단의 소득 불평등에 주목한 최민정(2015)도 해당 집단이 임금근로 집단에 비해 높은 경제적 이질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여성 집단 내 경제적 이질성이 가구의 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으로 관심을 확장한 두 번째 유형의 연구들을 살펴보자. 김영미와 신광영(2008)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여성들 간 소득 불평등의 확대가 가구소득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원인은 저소득층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열악한 일자리와 여성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에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순미(2014)는 가구생계부양 패턴과 여성의 가구소득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최근 코호트에서 여성 내부의 차이가 심화되고, 취업을 지속한 여성들의 소득기여도만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계층화된 방식으로 여성 고용이 전개됨을 밝혀냈다. 문지선(2015)은 여성 시간제 가구의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불평등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여성의 근로시간은 중간계층 이하의 소득격차를 확대하고 고소득 가구의 소득을 상당한 폭으로 증가시켜 가구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 집단 내 경제적 이질성 경향을 포착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이러한 개인 간 불평등이 가구소득 불평등으로 확장됨을 보여준다. 다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여성의 '근로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계를 일부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전업주부, 학생, 은퇴자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이 배제되어 있어 전체 여성의 불평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하지 않는 여성까지 포함하여 여성 집단 내 경제적 이질성을 살펴본다면 그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근로소득은 여성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주로 개인소득을 불평등 분석의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가구소득 불평등을 살펴본 연구들 역시 여성 개인의 소득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어 분석단위는 여전히 개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거주나 소비생활을 공유하는 기초 생활단위인 가구를 경유하여 나타나므로, 가구로 분석단위를 전환하였을 때에 보다 정확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공주·신광영, 2018). 셋째, 근로소득에 관한 논의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행 연구들은 주로 여성 집단 내 경제적 이질성을 만들어내는 주요 요인으로 노동시장 관련 변수에 주목해 왔다. 불평등 양상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적 이질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변수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산 불평등은 근로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자산 변수의 고려는 경제적 불평등 수준의 정확한 포착을 가능케 할 것이다(Piketty,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채택하였다. 우선 분석단위와 대상으로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상소득' 불평등에 주목하였다. 경상소득은 일상적으로 얻는 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한 소득을 의미하며, 이때 상속이나 복권당첨과 같은 예외적인 소득은 제외된다. 경상소득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면 경제적 이질성을 창출하는 자산 불평등 수준까지 포괄한 확장된 차원의 불평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여성의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에 주목하여 분석대상을 설정하였다. 가구소득 불평등을 살펴볼 경우 생애과정의 경험과 관련한 가구 특성 변수까지 논의할 수 있으므로, 특히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 분석에 적합하다. 그리고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불평등 논의를 확장하여, 가구 구성과 자산의 영향까지 변수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검증하는 1인가구와 노인가구 비중 및 자산 격차가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에 미치는 영향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추가적으로 1인가구와 노인가구라는 특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교차적 불평등 양상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불평등의 증첩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호작용 구조의 규명을 시도한 것이다(황규성, 2016). 이러한 전략은 교차적 불평등의 부정적 영향이 극심하게 미치는 집단을 이해하는 동시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와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21년 「가계금융복지패널조사」이다. 이 조사는 2010년부터 통계청에 의해 가계의 자산, 부채 동향, 복지 실태와 재무 건전성을 파악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가계금융복지패널조사」는 표본 수가 2만 가구로, 표본의 규모가 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의 많은 불평등 분석에서 고소득층이 배제됨에 따라 경제적 이질성이 과소 보고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할 때, 「가계금융복지패널조사」는 불평등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고소득층의 자산소득 분포가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매우 적합하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만 19세 이상인 여성 가구주 가구이다. 다만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 소득과 연령 측면의 취약성을 내포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집단이 전체 여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된 관심 중 하나가 1인가구와 노인가구로 대표되는 여성 가구주 비율의 증가가 불평등 심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 가구주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이 연구의 목적에 더욱 잘 부합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여성 가구주 가구의 수는 4,950가구이다.

2. 주요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가구 경상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공·사적 이전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은 가구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전소득은 소득보장정책이나 가족 간 사적 이전을 통한 소득을 의미한다. 경상소득은 조세 부과 이전의 소득이며, 상속이나 복권당첨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된다. 최종 분석에는 대수 변형을 한 가구 균등화 경상소득이 사용되었다.²⁾

독립변수는 노동시장 특성에 더해 가구 구성의 변화와 자산이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우선 가구 속성 변수를 나타내는 독립변수로 1인가구 여부와 노인가구 여부를 채택하였다. 1인가구는 가구원 수 변수를 재코딩하여 1인가구와 그 외 가구로 구분하였다. 노인가구는 모든 가구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를 의미하며, 비노인가구를 기준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주택을 포함한 자산의 규모가 직접적으로 여성 가구주의 경상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대수 변형을 거친 자산총액을 독립변수에 포함시켰다. 자산총액에는 금융자산(저축금액, 전월세보증금 등)과 실물자산(부동산금액, 자동차금액 등)이 해당된다.

추가적으로 불평등이 교차되는 지점을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독립변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변수들이 투입되었다. 1인가구이면서 노인가구인 경우, 자산 수준이 낮으면서 1인가구 혹은 노인가구인 경우 등 불평등의 중첩이 경상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상호작용 변수는 자산총액×노인가구 여부, 1인가구 여부×노인가구 여부, 자산총액×1인가구 여부 등 세 가지이다.

기존 불평등 분해 연구들을 참고하여 경상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가구주의 연령과 학력(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결혼상태(기혼, 비혼, 사별 및 이혼)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노동시장 특성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종사상 지위(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자, 무직 등 기타) 변수도 투입하였다.

2) 균등화 값은 가구 경상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OECD, 2020).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분석자료에 포함된 여성 가구주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수행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DASP(Distributive Analysis Stata Package) ver2.3을 통한 지니계수 분해, 빈곤율 측정 등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불평등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 기반 불평등 분해' 방법을 분석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불평등의 원인으로 간주되는 여러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중 회귀분석에 기초하여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할 수 있다(공주·신광영, 2018). 기존의 불평등 분해 방법은 하위집단(subgroups)과 요인(sources)을 기준으로 '불평등이 있다'는 것은 밝힐 수 있지만, '왜 그러한 불평등이 존재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내포했다. 이에 Fields(2003)에 의해 샤프리 값(Shapley value)의 원리를 이용하여 개별 독립변수가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회귀분석 기반 불평등 분해 방법이 제시되었다. 회귀분석 모형의 전체 설명력(R^2)을 분해하여, 각각의 독립변수가 이러한 설명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회귀계수와 독립변수의 분포를 동시에 고려하여 특정 독립변수들이 설명력(R^2)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계산하며, 이때 회귀모형 내 각 변수가 전체 분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귀분석 기반 불평등 분해 방법은 독립변수들이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선형적이고 부가적인 형태로 분해함으로써 불평등의 정확한 양상을 포착할 수 있게 한다(공주·신광영, 2018). 특히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여성 가구주는 개인 특성, 가구 특성 및 노동시장 특성 모두에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회귀분석 기반 불평등 분해 방법을 통해 전체 불평등에 대한 개별 변수의 기여도를 살펴볼 필요가 존재한다. 이상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Stata 17.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결과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여성 가구주 가구의 연 경상소득 평균은 2,996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의 연 경상소득 평균인 5,538만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그쳐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연령은 만 62.21세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령화되어 있었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가 40.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고졸 26.1%, 대졸 이상 21.74%, 중졸 11.35% 순으로 나타나 여성 간 학력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는 사별, 이혼이 72.53%로 가장 많고, 비혼과 기혼이 그 뒤를 이었다. 종사상 지위는 무직 등이 42.26%로 가장 많은 반면 자영자가 15.78%로 가장 적었고, 상용근로자가 24.4%, 임시·일용근로자가 17.56%로 나타났다. 무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존 노동시장 중심의 경제적 불평등 논의에 비해 확장된 불평등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 구성 중 1인가구의 비중은 62.81%로 여성 가구주 가구의 과반수 이상이 단독 가구에 해당되었다. 노인가구 비중 역시 41.84%에 달해, 노인이 여성 가구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확인시켜 준다. 여성 가구의 1인가구 증가 경향과 고령화 현상이라는 현실을 실제로 드러내고 있는 수치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또 다른 관심사인 연 자산총액의 평균을 살펴보면 24,098만원으로, 전체 표본의 자산총액 평균인 45,736만원의 절반 가량에 그쳐 자산 부문에서도 여성 가구주 가구가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표 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단위 : 만원, 세, 명, %)

변수		값	비중
연 경상소득		2,996	100.00
연령		62.21	100.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2,020	40.81
	중학교 졸업	562	11.35
	고등학교 졸업	1,292	26.10
	대학교 졸업 이상	1,076	21.74
결혼상태	기혼	645	13.03
	비혼	715	14.44
	사별, 이혼	3,590	72.53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208	24.40
	임시·일용근로자	869	17.56
	자영자	781	15.78
	무직 등	2,092	42.26
1인가구 여부	1인가구	3,109	62.81
	다인 가구	1,841	37.19
노인가구 여부	노인가구	2,071	41.84
	비노인가구	2,879	58.16
자산총액		24,098	100.00

주: 가구 균등화 전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함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가구 경상소득은 다양한 소득의 총합이므로 세부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 비중을 살펴보았다. 전체 가구에 대한 비중과 함께,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가구 구성인 노인/비노인가구와 1인/다인 가구의 경상소득 구성 비중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전체 가구는 근로소득 비중이 가장 높고 공적이전소득이 그 뒤를 이었으나, 노인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높아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노인가구는 이전소득의 총 비중이 74.2%에 달해 비노인가구의 이전소득 비중(24.5%)과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1인가구 역시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근로소득의 비중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2〉 가구 유형별 경상소득 구성 비중

(단위 : %)

경상소득 구성	가구 유형별 비중				
	전체 가구 (n=4,950)	노인가구 (n=2,071)	비노인가구 (n=2,879)	1인가구 (n=3,109)	다인 가구 (n=1,841)
근로소득	37.6	11.7	56.2	27.4	54.7
사업소득	10.3	4.3	14.6	8.2	13.8
재산소득	6.9	9.8	4.8	8.1	4.8
공적이전소득	34.1	55.5	18.7	41.5	21.6
사적이전소득	11.2	18.7	5.8	14.8	5.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가구 균등화 전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함

자산총액 역시 다양한 자산을 합산한 총 금액이므로 이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았으며, 가구 유형별 추가적인 구성 비중을 제시하였다. 전체 가구의 자산 중 가장 많은 구성을 차지하는 자산은 부동산이고, 그 뒤를 저축금액과 전월세보증금이 뒤따랐다. 노인가구는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1인가구는 저축금액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다만 자산총액 평균은 전체 가구가 노인가구와 1인가구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유 자산 수준에 있어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가구 유형별 자산총액 구성 비중

(단위 : %, 만원)

자산총액 구성	가구 유형별 비중		
	전체 가구 (n=4,950)	노인가구 (n=2,071)	1인가구 (n=3,109)
저축금액	29.82	29.76	31.54
전월세보증금	21.90	16.92	22.41
부동산금액	44.38	51.88	43.26
기타실물자산	3.90	1.43	2.79
합계	100.0	100.0	100.0
자산총액 평균	24,098	18,660	18,886

2.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불평등 수준

회귀분석과 불평등 요인분해 분석에 앞서 분석자료의 경상소득 불평등 수준을 살펴보았다 (<표 4> 참조). 여성 가구주 가구의 지니계수는 0.453으로 남성 가구주 가구의 지니계수인 0.401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를 통해 여성 가구주 가구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상위 소득 가구 5%의 점유율은 20.8%이고 상위 10%로의 소득집중은 33.1%로 높게 나타난 반면, 하위 40%의 점유율은 13.3%에 그치고 있다.

소득분포의 양극단 변화를 보다 잘 드러내 주는 팔머 지수(Palmer Index)를 살펴보면 (Atkinson, 1970), 하위 40% 점유율 대비 상위 10% 점유율이 2.5배인 것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경제적 이질성이 포착되었다. 자산의 중요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재산과 소득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여성 가구주 가구의 재산/소득의 비율은 약 8배로 나타나, 독일이나 미국의 재산/소득 비율 수치가 4-5배 가량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Piketty and Zucman, 2014).

마지막으로 상대적 빈곤율은 중앙값의 절반 이하인 가구의 비율로 측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하위 집단의 비중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측정 결과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22.57%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상대적 빈곤율인 15.3%(2020년 기준)보다 상당 수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1).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을 만들어 내는 기저에 소득 최하층인 빈곤 여성 가구가 높은 비중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경상소득 불평등 수준

(단위 : %, 배)

내용	값
지니계수	0.453
상위 5% 점유율	20.8
상위 10% 점유율	33.1
하위 40% 점유율	13.3
팔머(Palmer) 지수	2.489
재산/소득 비율	8.04
빈곤율	22.57

주: 가구 균등화 전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함

3. 회귀분석 결과

1)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 원인 분석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상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본 연구의 핵심적 관심사인 자산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산총액이 증가할수록 경상소득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소유 여부가 소득 기회, 교육, 인적자원 형성, 문화자본 등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상이한 경제적 지위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상의 기저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통한 자산소득의 증식이라는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예상해볼 수 있다.

가구 구성의 변화가 가구 경상소득에 미치는 영향력도 포착되었다.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의 경우 경상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1인가구의 여성 가구주가 다인가구의 여성 가구주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1인가구의 전환이 경제적 충격 가능성을 높인다는 기존 논의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박건·김연재, 2016).

비노인가구에 비해 노인가구라는 특성도 여성 가구주의 경상소득을 낮추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긴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으로 인해 여성 노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미진입 또는 경력단절과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 배제로 발생하는 여성 노인의 낮은 경제적 지위는 개인의 빈곤 위험을 높여 왔다. 노령이라는 특성이 소득을 감소시킨다는 이러한 분석결과는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인적자본의 취약성, 낮은 공적연금 수급 등으로 인해 여성 노인의 약 70%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맥이 닿아 있다(원시연, 2011).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는 여성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역시 경제적 불평등에 기여하고 있었다. 상용근로자에 비해 임시·일용근로자이거나 무직인 경우 경상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시·일용자의 경우 감정과 서비스, 보살핌을 요하는 노동에 여성을 집중시키고 이를 비전문화, 탈숙련화 함으로써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고착화하는 노동시장의 현실과 관련되어 있다(김혜정, 2015).

〈표 5〉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모형 1	
	Coefficients	Standard Error
상수	6.938***	.075
연령	-.000	.001
교육(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116***	.027
고등학교 졸업	.124***	.025
대학졸업 이상	.265***	.031
결혼 상태(유배우자 가구)		
비혼	-.124**	.037
이혼, 사별	-.121***	.027
종사상 지위(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319***	.026
자영자	-.109***	.025
무직 등	-.494***	.024
1인가구 (다인가구)		
1인가구	-.107***	.022
노인가구 (비노인가구)		
노인가구	-.162***	.027
자산총액	.111***	.004
R-squared	0.4589	
Adj. R-squared	0.4576	
F value	348.97***	
No. of observations	4,950	

주: **:p<.01, ***:p<.001

2) 가구 구성과 자산 변수의 조절효과 분석

모형 1에서 가구 경상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조절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주목한 가구 구성(노인가구, 1인가구)과 자산 변수가 어떠한 조절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평균 연령과 노인가구 비중이 높은 본 연구의 표본 특성을 고려하면 '고령'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세부적으로 첫째, 노인가구인 경우 자산총액이 경상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 살펴 보았다. 둘째, 노인가구인 경우 1인가구 여부가 경상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 살펴

보았다. 셋째, 1인가구인 경우 자산총액이 경상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절효과의 추가적인 분석은 경제적 이질성을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요인들이 중첩됨에 따라 교차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여성 노인가구이면서 자산수준이 낮은 경우, 혹은 여성 1인가구이면서 자산수준이 낮은 경우와 같이 불평등 기제의 누적에 경상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모형 2를 살펴보면 자산총액의 증가가 경상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노인 가구 집단에게는 이러한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총액의 경상소득 증가 효과는 비노인가구에 비해 노인가구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조절효과는 회귀분석상의 부호만으로는 명확한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파악을 위하여 Lee(2020)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상호작용 그래프를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1]을 살펴본 결과 자산총액이 경상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여성 노인가구에게 부정(-)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노인가구의 경상소득 증가세에 비하여 노인가구의 경상소득 증가세가 현저히 둔한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노인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산의 증가가 경상소득의 증가를 견인하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 원인을 추론해 보면 첫째, 노인가구의 경우 자산총액 평균이 낮아 자산소득의 기반 자체가 적은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노인들은 부동산 자산의 보유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부족한 편이다(이주미·김태환, 2020). 따라서 자산의 증가가 곧바로 경상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적인고 고정적인 투자를 더 선호하는 노인가구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최효미, 2007).

모형 3을 살펴보면 1인가구인 경우 경상소득이 감소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노인가구에게 약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의 조절효과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 노인가구 집단에게는 1인가구가 가지는 경상소득 감소효과가 완화되고 있다. 1인가구의 경상소득 감소효과는 주로 근로소득 감소에서 비롯되는데, 노인가구의 경상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에 ‘근로소득’ 감소에 따른 경상소득 감소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³⁾ 이러한 결과는 노인 1인가구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접근은 근로소득보다는 이전소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모형 4는 자산총액의 경상소득 증가효과가 1인가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자산총액이 가지는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 완화 효과는 1인가구의 경우 부정(-)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1인가구 집단의 경우 자산의 경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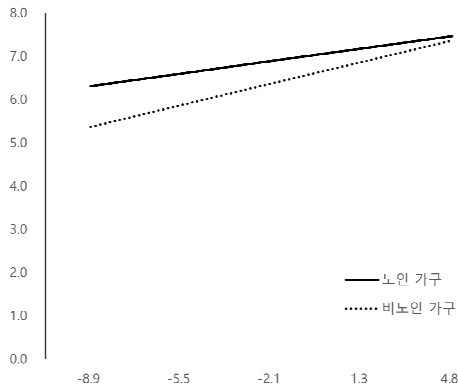
3)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별도 분석 결과, 다른 모든 조건들이 동일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경상소득을 증가시키며, 그 중 근로소득이 상당히 높은 기여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효과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낮게 나타나 여성 1인가구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 원인을 추정해보면, 첫째, 1인가구의 낮은 자산총액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청년 1인가구의 상당히 낮은 주거관련 자산 수준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1인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다인가구와 달리 주택이나 부동산 자산에 편중되어 있어 경상소득의 증가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김옥연·문영기, 2011; 김선주·김행중,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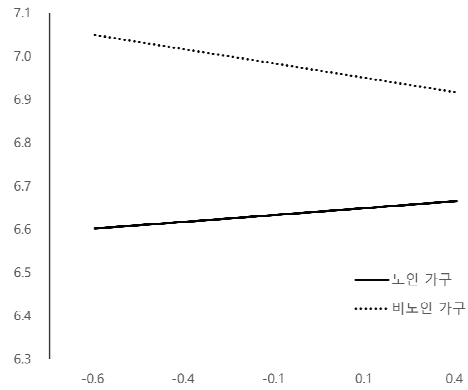
〈표 6〉 조절효과 포함 회귀분석 결과

	모형 2		모형 3		모형 4	
	Coefficients	S.E.	Coefficients	S.E.	Coefficients	S.E.
독립변수						
상수	6.669***	.083	6.966***	.075	6.718***	.099
연령	-.002	.001	-.000	.001	-.001	.001
교육(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131***	.027	.122***	.027	.118***	.027
고등학교 졸업	.122***	.025	.126***	.025	.124***	.025
대학졸업 이상	.238***	.031	.262***	.031	.258***	.031
결혼 상태(유배우자 가구)						
비혼	-.109**	.037	-.129**	.037	-.108**	.037
이혼, 사별	-.105***	.027	-.148***	.028	-.105***	.027
종사상 지위(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300***	.026	-.315***	.026	-.314**	.026
자영자	-.102***	.025	-.108***	.025	-.109***	.025
무직 등	-.475***	.024	-.496***	.024	-.490***	.024
1인가구 (다인 가구)						
1인가구	-.104***	.022	-.133***	.023	.181*	.088
노인가구 (비노인가구)						
노인가구	-.395***	.081	-.324***	.053	-.162***	.027
자산총액	.146***	.006	.111***	.004	.135***	.008
조절효과						
자산총액×노인가구	-.061***	.008				
1인가구×노인가구			.196***	.056		
자산총액×1인가구					-.032**	.009
R-squared	0.4648		0.4603		0.4602	
Adj. R-squared	0.4634		0.4589		0.4588	
F value	329.69***		323.81***		323.70***	
No. of observations	4,950		4,950		4,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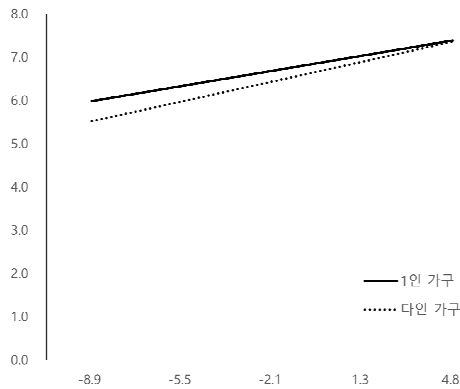
주: *:p<.05, **:p<.01, ***:p<.001



〈그림 1〉 자산×노인가구의 조절효과



〈그림 2〉 1인가구×노인가구의 조절효과



〈그림 3〉 자산×1인가구의 조절효과

4. 불평등 분해 결과

회귀분석 결과는 특정 변수들이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알려주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인지까지는 나타내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귀분석 기반 불평등 분해를 수행하였다. 〈표 7〉은 가구 경상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회귀계수는 단위 변화에 따른 가구 경상소득 변화를 보여주며, 불평등 기여도는 여기에 변수의 분산까지를 함께 고려한 것이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에 대한 자산의 영향력이다. 자산이 소득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는 14.24%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여성 가구주의 교육

기여도인 6.53%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격차가 교육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의 소득 불평등 논의들이 교육을 매개한 노동시장의 인적 자본을 주요 불평등 요인으로 지적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들에서는 자산의 영향력이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도 자산의 불평등도가 근로소득의 불평등도보다 훨씬 크고, 자산소득이 전체 소득 불평등에 기여하는 비중이 점증 추세에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박기백, 2014; 이우진, 2018). 무엇보다도 부동산 자산이나 금융 자산과 같이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을 보유한 여성과 보유하지 못한 여성 간의 격차가 경제적 이질성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산 미보유라는 변수는 가구 구성 변수와 교차되면서 중층적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불평등의 강도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할 또 하나의 변수는 가구 구성이다. 1인가구 여부와 노인가구 여부 변수는 전체 소득 불평등 중 7.68%의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가구는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 강화에 5.09% 기여하여 대졸 이상의 불평등 기여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인가구의 경우 비노인가구에 비해 빈곤 확률이 높으며, 고령화와 같은 연령 구조의 변화가 전체 소득 불평등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 기존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성명재·박기백, 2009; 박시내, 2014). 근로능력의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와 공적 이전소득 역할의 미비로 여성 노인들이 빈곤 상태로 전락하는 반면, 비노인 여성은 여러 형태의 경제활동을 지속하게 되면서 연령에 따른 여성 가구주 가구의 계층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인가구라는 변수는 소득 불평등에 2.59% 가량 기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정책적 개입을 통해 1인가구의 경상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에서 무직인 경우가 전체 경제적 불평등의 15.39%를 설명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들 간 종사상 지위보다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지 여부 자체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에서는 안정적인 지위를 중심으로 취업이 지속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위가 불안정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아예 탈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을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이순미, 2014).

〈표 7〉 전체 불평등에 미친 각 변수의 기여도 분석결과

분해(decomposition)	기여도	
잔차	54.107	0.052
연령	0.423	0.000
교육(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0.032	0.000
고등학교 졸업	1.062	0.001
대학졸업 이상	5.474	0.005
결혼 상태(기혼)		
비혼	-1.022	-0.001
이혼, 사별	2.551	0.003
종사상 지위(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1.116	0.001
자영자	-1.055	-0.001
무직 등	15.391	0.015
1인가구 여부(다인 가구)		
1인가구	2.587	0.003
노인가구 여부(비노인가구)		
노인가구	5.089	0.005
자산총액	14.244	0.014
전체 불평등	100.000	0.096

주: 조절효과를 제외한 모형 1을 기준으로 분석함

V. 결론

1. 주요 분석결과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 수준을 살펴보고 그 구체적인 요인을 포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 논의의 제한점들을 보완하고자 여성 가구주의 가구 경상소득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여성의 경제적 이질성의 경우 생애주기상의 돌봄, 경력 단절과 같은 상이한 경험들에 영향을 받고, 이때 가구 형태가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가구 구성 변화의 영향력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과 같은 자산의 증가가 경상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성 가구주 가구의 불평등 역시 자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추가적으로 가구 구성과 자산 간 상호작용을 함께 분석하여 교차적 불평

등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표본 수가 크고 여타 자료에 비해 고소득층이 다수 표집되어 있는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회귀분석 기반 불평등 분해 분석 방법을 채택하여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요인별 불평등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 구성상의 측면에서 여성 가구주 가구의 1인가구와 노인가구 비중이 높음이 확인되었다. 자산총액의 연 평균은 전체 표본의 자산총액의 절반 가량에 불과하여, 여성 가구주 가구의 열악한 자산 보유 현황이 나타났다. 상용근로자에 비해 무직 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여성 가구주 가구의 고용 상태 격차도 부각되고 있다.

둘째, 경상소득과 자산의 구성비를 가구 구성별로 살펴보면, 우선 전체 가구와 비노인가구는 근로소득 비중이 높은 반면, 노인가구는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높고, 근로소득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산의 경우 전체 가구, 노인가구 및 1인가구의 구성비 양상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가장 많은 구성을 차지하는 자산은 부동산 금액이고, 그 뒤를 저축금액과 전월세보증금이 뒤따랐다. 다만 자산총액 평균은 전체 가구가 노인가구와 1인가구에 비해 매우 높아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자산 보유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분석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불평등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지니계수, 팔머 지수, 재산/소득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 수준은 상당히 높았다. 여성 가구주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도 우리 사회 전체 빈곤율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넷째,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상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인가구인 경우 다인가구에 비해 경상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노인가구에 비해 노인가구라는 특성은 여성 가구주의 경상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인가구나 노인가구로의 전환이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을 강화한다는 강력한 근거를 제공한다. 자산총액의 경상소득에 대한 유의미한 정적 영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산소유 여부가 노동시장, 교육, 가구 구성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 증가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는 여성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에 비해 임시·일용근로자이거나 자영자 및 무직인 경우 경상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추가적으로 가구 구성(노인가구, 1인가구)과 자산이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불평등에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노인가구인 경우 자산총액이 경상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자산총액의 증가가 경상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노인

가구에게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경우 자산총액 평균이 낮아 자산소득의 기반 자체가 적은 것 등에서 기인한다. 또한 노인가구에 대해 1인가구 여부가 경상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1인가구의 경상소득 감소 효과는 노인가구에게 약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소득과 근로소득 비중이 높은 1인가구와 달리, 노인가구의 이전소득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과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인 경우 자산총액이 경상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1인가구 자산의 경상소득 증가효과 그래프의 기울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와 유사하게 1인가구의 낮은 자산총액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불평등 요인분해 분석결과 자산총액은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상소득 불평등에 높은 기여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자산의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최근 들어 근로소득의 불평등도보다 자산소득의 불평등도가 훨씬 크고 점차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기존 연구들의 통설은 인적자본에 기반한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우리 사회 불평등 심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었다(이우진, 2018). 그러나 교육의 불평등 기여도보다 높게 나타난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는 이러한 논의들의 유효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효과적인 정책 대안은 자산을 보유한 여성과 미보유한 여성 가구주 가구 간 경제적 이질성 심화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가구 구성 요인 중 노인가구는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상소득 불평등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었다. 여성 노인들이 빈곤해질 가능성은 매우 높은 반면, 비노인 여성 가구는 경제활동을 지속하게 되면서 연령에 따른 여성 가구주 가구의 계층화가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정책적 함의

이상의 분석결과는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 완화를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여성 내부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 격차로 인한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을 근로소득 불평등으로 상정해 온 많은 연구들은 근로소득 수준의 개선이 불평등 완화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자산은 이미 경상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적 요인이 되었으며, 더 이상 자산 불평등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 되기 어렵다. 자산은 근로소득에 비해 불평등도가 매우 높으며, 저축보다

는 상속, 증여 및 자본이득에 의해 자산이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우진, 2018). 이러한 자산 불평등의 심화 현상은 여성 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자산 보유 여부가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을 심화시키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산에 따른 경상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여성 가구의 자산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되, 자산기반복지(asset-based welfare)의 확대가 자칫 역진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예컨대 경제 활동기의 자산을 노후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주택연금과 같은 제도는 남성 고소득층 등 일부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으므로,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누적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김성아·이태진·최준영, 2021). 여성 가구가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도록 지원하되 자산기반의 제도가 오히려 자산 격차를 확대시키는 기제가 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구 구성의 변화가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을 증가시키는 기제로 작동하지 않도록 가구 구성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산 불평등의 부정적 영향이 노인가구와 1인가구에서 더욱 극심하게 나타나 불평등이 응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노인가구의 경우 자산 수준 자체가 낮고 유동화 가능성이 낮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아 자산을 통한 경상소득의 증가를 적극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비노인가구에 비해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이것을 노후 소득원으로 활용하기란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근로소득보다는 이전소득을 통한 경상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했을 때, 공적이전 소득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였거나 중도 이탈 혹은 낮은 소득수준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은 '여성' 노인가구라는 점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노동시장 지위에 기초한 제도와 함께 시민권에 기반한 기초연금과 같은 수당 형태의 제도를 동반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동시장 지위에 기반한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크레딧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며, 시민권 중심의 기초연금제도는 급여 적정선이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인가구에 대한 개입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이질성을 고려한 다층적 지원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논의들에서는 1인가구의 증가가 곧 여성 노인가구의 증가로 치환되어 온 경향이 있고,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학문적 관심은 독거노인에 집중되어 왔다(강은나·이민홍, 2016). 그러나 1인가구의 동질성을 전제한 정책은 1인가구 전반의 불평등 개선에 최적의 효과를 가지지 못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1인가구와 노인가구의 경상소득 증감 양상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 1인가구가 갖는 경제적 이질성의 발생 원인을 고려한 보다 면밀한 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여성 '노인' 1인가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와 확대와 같은 이전소득 중심의, 여성 '청년' 1인가구는 양질의 일자리 지원, 보편적 일·가족 양립

정책과 같은 근로소득 중심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간 세대인 여성 ‘중장년’ 1인가구의 경우 사회경제적 상황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취업지원과 노후준비교육 서비스가 함께 지원될 필요성이 제기된다(강은나·이민홍, 2016). 일례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정책 대상자 선정에 있어 1인가구 여부를 고려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김종숙·배호중, 2014).

셋째, 무엇보다도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에는 하위층에 위치한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최하층에 자리한 여성들이 겪는 불평등의 교차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1인 노인가구는 중층적 불평등을 겪으면서 더욱 취약한 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인 노인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사회부조의 도입이나 기초연금의 수준 확대를 고려해볼 수 있다(김혜연, 2017).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의 완화는 여성들의 계층화 현상을 고려하여 인구 집단별 세부적인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연구 설계상의 몇 가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1인가구를 포함하는 과정에서 동질혼과 자녀 유무 변수의 결측치가 많아, 해당 변수들이 그간 여성 간 불평등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단일 시점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어, 불평등의 추이와 역동성까지 살펴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 수준을 드러내고, 특히 자산이 불평등 심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동함을 밝혀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동시에 주요 변수들 간 조절효과를 분석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각각의 기여도를 제시함으로써 여성 가구주 가구의 불평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였다.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이질성의 수준과 원인을 이해하려는 본 연구의 노력이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은나·이민홍. 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34: 47-56.
- 계봉오. 2015. “인구고령화·사회경제적 발전·사회불평등과의 관계.” 『경제와사회』 106: 41-72.
- 공 주·신광영. 2018. “한국의 소득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접근.” 『산업노동연구』 24(3): 1-34.
- 김선주·김행중. 2018. “1인가구의 자산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2): 111-119.
- 김성아·이태진·최준영. 2021. “주택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미. 2010. “자본주의 다양성 관점에서 본 젠더와 계급의 교차성.” 『한국여성학』 26(3): 65-89.
- 김영미. 2014. “젠더와 계급의 교차성 관점에서 본 일-가족 양립정책.” 『사회과학연구』 31(2): 1-26.
- 김영미. 2015. “분절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불평등의 복잡성.” 『경제와사회』 106: 205-237.
- 김영미·신광영. 2008. “기혼여성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가구소득 불평등의 변화.” 『경제와사회』 77: 79-106.
- 김옥연·문영기. 2011. “가계 자산구조와 주택소유결정요인 분석 : 보통가구와 1인가구의 비교.” 『주거환경 : 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9(1): 25-38.
- 김정은·정혜은·남영주. 2018. “여성 1인가구 현황과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국내 2차자료 분석.”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3(3): 463-488.
- 김종숙·배호중. 2014. “세대별·성별 1인가구의 고용과 가구경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연·홍백의. 2009. “성별 집단 내 소득불평등(inequality among gender)의 변화 추이 및 원인.” 『한국사회복지학』 61(2): 391-415.
- 김혜연. 2017. “기초연금 도입이 성별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상황과복지』 54: 120-159.
- 김혜정. 2015.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5(3): 7-40.
- 문지선. 2015.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15(1): 43-82.
- 박 건·김연재. 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 405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 노후 준비와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박기백. 2014. “유형별 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재정학연구』 7(2): 95-116.
- 박시내. 2014. “여성가구주 가구의 특성 및 빈곤 분석.” 통계개발원 편.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2010년 하반기-2. 대전: 통계개발원.
- 성명재·박기백. 2009.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연구』 57(4): 5-37.
- 송다영·백경훈. 2019. “저출산 시대 해법·성평등이 답이다.” 제21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자료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신광영. 2016. “[서평] 중층적 불평등 구조의 진단과 치유법.” 『시민과세계』 29: 259-267.
- 원시연. 2011. “여성노인의 빈곤과 정책과제.” 『입법정책』 5(2): 7-31.
- 이병희. 2014. “노동시장 불평등과 가구소득 불평등.” 『보건복지포럼』 215: 32-43.
- 이성균·신희주·김창환. 2018. “한국 사회 가구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 연구 성과와 과제.” 『경제와사회』 127: 60-94.

- 이순미. 2014. "가구생계부양 유형의 변화와 여성 내부의 계층화." 『한국여성학』 30(2): 1-52.
- 이우진. 2018. "한국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현황과 과제." 『정부학연구』 24(2): 29-59.
- 이주미·김태환. 2020. "노인빈곤 원인에 대한 고찰: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보진사회연구』 40(2): 193-221.
- 이현정. 2018. "여성가구주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주택자산효과 분석." 『서울도시연구』 19(1): 1-20.
- 정이환. 2004. "서비스산업화와 노동의 변화." 『한국사회학』 38(4): 159-186.
- 최민정. 2015. "여성의 노동공급유형 및 임금결정요인 분석: 임금근로와 자영업 간 비교." 『사회복지정책』 42(3): 107-133.
- 최효미. 2007. "노인가구의 소득 원천." 『노동리뷰』 2007년 4월호: 69-79.
- 통계청. 2021.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56>에서 2022년 7월 28일 인출.
- 황규성. 2016. "다중격차: 다차원적 불평등에 관한 개념적 시론." 『동향과 전망』 97: 9-44.
- 황수경. 2003. "여성의 직업선택과 고용구조."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Atkinson, A. 1970.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2: 244-63.
- Cherlin, A. J. and Seltzer, J. A. 2014. "Family Complexity, the Family Safety Net, and Public Polic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54: 231-239.
- Elder, G. H. and Shanahan, M. J. 2006. "The life Course and Human Development." pp. 668-715. in Richard M. Lerner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 Fields, G. S. 2003. "Accounting for Income Inequality and Its Change: A New Method with Application to the Distribution of Earnings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in Labor Economics* 22: 1-38.
- Johnson, D. and Wilkins, R. 2003. "The Effects of Changes in Family Compositions and Employment Patterns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Australia: 1982 to 1997-1998." Melbourne Institute Working Paper No. 19/03. 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Melbourne.
- Kang, J. Y. and Meyers, M. K. 2018. "Family Policy Changes across Welfare and Production Regimes, 1990 to 2010." pp. 66-82. in Guðný B. Eydal and Tine Rostgaard (eds.). *Handbook of Family Policy*. Cheltenham, UK: Edward Elgar Publishing. DOI: <https://doi.org/10.4337/9781784719340>
- Kim, K. and Hwang, E. J. 2020. "Re/familialization or De-familialization: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Family Policies in Terms of Stratification."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46(6): 848-861. DOI: 10.1080/01488376.2019.1693477.

- Korpi, W., Ferrarini, T. and Englund, S. 2013. "Women's Opportunities under Different Family Policy Constellations: Gender, Class, and Inequality Tradeoffs in Western Countries Reexamined." *Social Politics* 20(1): 1-40.
- Lee, I. H. 2020. EasyFlow Statistics macro. Retrieved from: <http://www.statedu.com>. KOREA. DOI : 10.22934/StatEdu.2020.01.
- Lykke, N. 2010. *Feminist Studies: A Guide to Intersectional Theory, Methodology and Writing*. New York: Routledge.
- McCall, L. 2001. *Complex Inequality: Gender, Class and Race in the New Economy*. New York: Routledge.
- Morel, N. 2007. "From Subsidiarity to 'Free Choice': Child- and Elder-care Policy Reforms in France, Belgium, Germany and the Netherlands." *Social Policy Administration* 41(6): 618-637.
- Murtin, F. and d'Ercole, M. M. 2015. "Household Wealth Inequality across OECD Countries: New OECD Evidence." Paris: OECD.
- OECD. 2011.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 A Synthesis Report." Paris: OECD.
- OECD. 2020. "Compare Your Income – Methodology and Conceptual Issues." <https://www.oecd.org/statistics/Compare-your-income-methodology.pdf>
- Piketty, T.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Mas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Piketty, T. and Zucman, G. 2014. "Capital is Back: Wealth-income Ratios in Rich Countries, 1700–2010."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9(3): 1255-1310.
- Smith, S. A. 1991. "Sources of Earnings Inequality in the Black and White Female Labor forces." *The Sociological Quarterly* 32(1): 117-138.
- Yuval-Davis, N. 1983. "Contextualizing Feminism: Gender, Ethnic and Class Divisions." *Feminist Review* 15: 62-75.

Abstract

Level and Causes of Economic Heterogeneity in Female-headed Households in Korea

Eun Jung Hwang (Chung-Ang University)

Kyo-seong Kim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level and causes of economic heterogeneity in female-headed households. To this end, household current income was set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contribution of individual variables was calculated by performing regression-based inequality decomposition analysis. The labor market, household composition and asset characteristics of female householders were simultaneously considered,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ach variable was also examined to capture intersectional inequality. The level of economic heterogeneity of female headed households was found to be relatively high through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inequality indicators. The contribution of wealth to inequality was also high, suggesting that wealth inequality is a major factor in generating household current income inequality. Furthermore, the economic heterogeneity of the female headed household was reinforced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wealth and household composition variables. These analysis results reveal the overlapping inequality experienced by the women group in a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position. It is necessary to find effectiv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underprivileged in order to alleviate the economic heterogeneity of female headed households.

Key words: female-headed households, economic heterogeneity, intersectionality, household composition, wealth

(투고일: 2022. 07. 30. / 심사일: 2022. 08. 08. / 게재확정일: 2022. 09. 07.)